

##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

-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가 전면에 이슈로 등장하였음. 지방정치의 회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추진되고 있는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정치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어 여성계 전반에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둘러싼 찬반 논의를 살펴보고 폐지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여성가족부의 후원하에 지난 2013년 9월 4일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현안포럼』을 개최한 바 있음. 본고는 위 포럼의 발표문과 토론문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을 밝혀둠.<sup>1)</sup>

1) 본 포럼의 발표문은 『2014년 지방선거와 여성대표성 전망과 과제』(김원홍, 김복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며,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은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상임대표), 김정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이명수(새누리당 국회의원), 이현출(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 유성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유승희(민주당 국회의원/전국여성위원장), 정연주(성신여자대학교 교수) (가나다 순) 등임.

### I. 여성 정치적 대표성의 국내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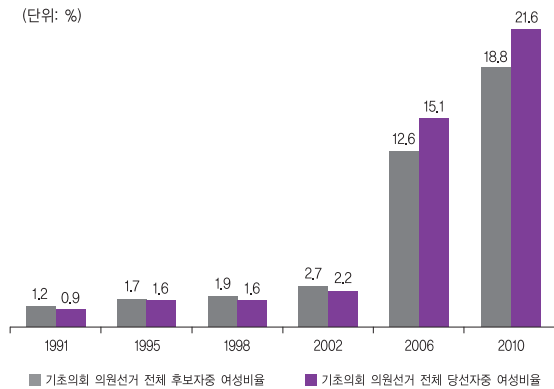
#### 이슈 #1

####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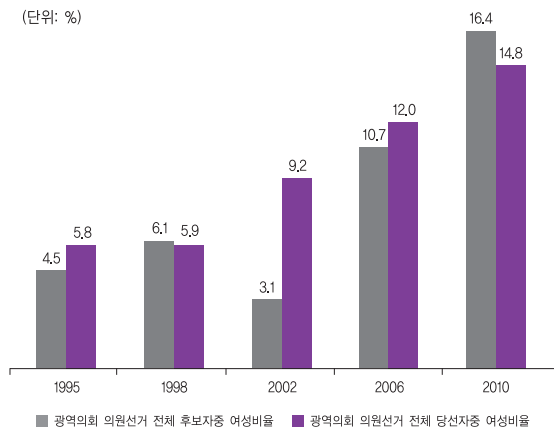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50% 의무규정 및 교호순번제 등의 도입으로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 및 여성 당선자 비율이 크게 증가함

- 1991년 지방자치 재개 이후 2000년 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및 여성할당 30% 도입을 시작으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여성추천보조금제도, 기초의회 비례대표제, 여성할당 50% 의무규정 및 교호순번제(2006년), 국회의원 선거구별 여성후보 1인 이상 의무추천(2010년) 등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들이 잇달아 마련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비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여성 당선인수도 늘어났음.(표 1))
- 기초의회의 경우 전체 후보자 중 여성비율이 1991년 1.2%에서 2010년 18.8%로, 전체 당선자 중 여성비율은 동기간동안 0.9%에서 21.6%로 증가하였음. 광역의회의





〈그림 1〉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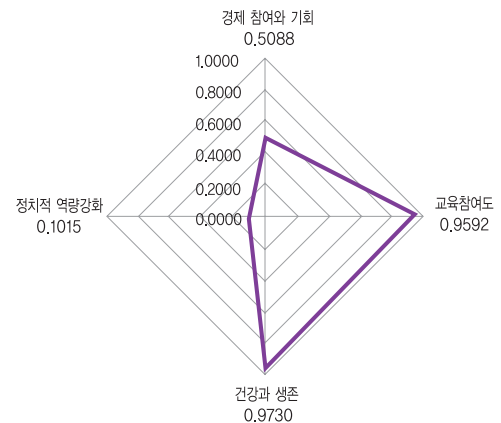


〈그림 2〉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비율

경우 전체 후보자 중 여성비율이 1995년 4.5%에서 2010년 16.4%로, 전체 당선자 중 여성비율이 동기간 동안 5.8%에서 14.8%로 증가하였음.(〈그림 1〉〈그림 2〉)

☞ **정치적 역량 강화 부문의 취약성으로 인해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는 135개국 중 108위에 불과함.**

- 최근 수 년동안 이루어진 국회, 지방의회 등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성(性)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부문 여성 대표성의 취약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성(性)격차지수 (Gender Gap Index)는 135개국 중 108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성의 정치적 역량 강화 부문이 여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여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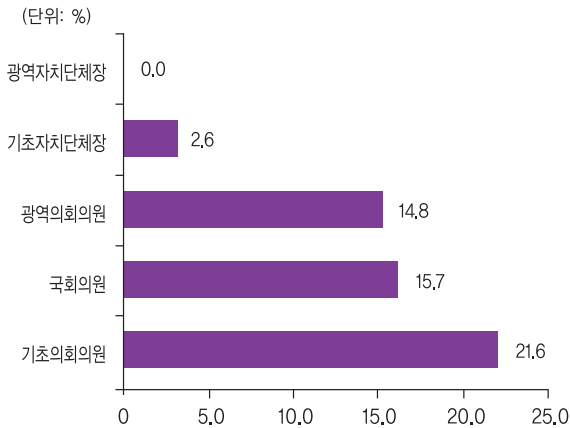


〈그림 3〉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부문별 현황(2012년)

〈표 1〉 여성 지방의원 확대 지원 제도 현황

구분	지방의회	비고
2000년	지역구	
	비례	
2002년	지역구	2002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2005년	지역구	2006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2006년	지역구	
	비례	
2010년	지역구	2010년 지방선거 적용
	비례	

-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비율은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국회의원 중 15.7%, 2010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중 0%, 기초자치단체장 중 2.6%, 광역의회의원 중 14.8%, 기초의회의원 중 21.6%임.(그림 4)



주 : 국회의원의 경우 2012년 현재 기준, 그 외의 자료는 2010년 기준임.

〈그림 4〉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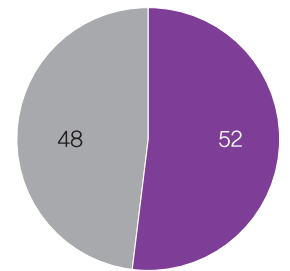
## 이슈 #2

### 정치부문 여성할당제의 국제적 실시 현황

☞ 2013년 7월 현재 세계 196개국 중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02개국임.

- 2013년 7월 현재 세계 196개국 중 IPU(Inter-Parliamentary Union) 회원국이며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102개 국가(52%)임. 102개 국가들의 여성 의원 비율 평균은 20.9%임.(그림5)

(단위: %)



■ 할당제를 실시하는 국가 비중  
■ 할당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 비중

주 : 여성할당제 실시 국가 비중(전체 196개국 중 102개국)은 IPU 회원국중에서 계산된 수치임.

〈그림 5〉 전세계 국가 중 여성할당제 실시 국가 비중

☞ 여성할당제 유형은 크게 후보자 수 할당, 의석할당, 정당할당, 후보자 수 할당과 정당할당의 병행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이들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여성할당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후보자 수 할당'은 선거후보자 명부 작성시 여성 혹은 대표성이 낮은 성(性)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하는 것임. 둘째, '의석할당'은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셋째, '정당할당'은 법규정은 없지만 정당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성(性)'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것임. 일부 국가들은 '후보자 수 할당'제와 '정당할당'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2〉 여성할당제 유형

유형	후보자 수 할당	의석 할당	정당 할당	후보자 수 할당 + 정당 할당
내용	선거후보자 명부 작성시 여성 혹은 대표성이 낮은 성(性)에게 일정비율을 할당하도록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보장	헌법이나 관련법으로 의석의 일정비율을 여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함	법 규정은 없으나 정당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성(性)'에 일정비율을 할당	-
채택국가	세네갈, 동티모르, 벨기에, 앙고라, 네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가이아나 등 8개국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등 4개국	스웨덴,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카라과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모잠비크, 네덜란드, 독일 등 8개국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알제리아 등 6개국

주 : 채택국가의 예는 하원 혹은 국회의 여성의원비율이 30%인 이상인 26개국가를 기준으로 함.

☞ 하원 혹은 국회의원이 30%이상인 국가를 국제 비교한 결과, 정당할당제를 채택한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하원 혹은 국회의 여성의원비율이 30%이상인 국가(총 26개국)들을 비교해 본 결과, '후보자 수 할당' 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세네갈, 동티모르, 벨기에, 앙고라, 네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가이아나 등 8개국, '의석 할당' 제의 경우는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등 4개국, '정당할당' 제의 경우는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카라구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모잠비크, 네덜란드, 독일 등 8개국, '후보자 수 할당' 제와 '정당 할당' 제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경우는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멕시코, 스페인, 슬로베니아, 알제리아 등 6개국임. 정당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하원 혹은 국회의 여성의원비율이 30%이상인 국가 (총 26개국)들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30% 의석할당, 여성전용선거구제, 여성의회, 40~50% 후보자 수 할당 등을 채택하고 있음. OECD 국가들도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스를 제외하고,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및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그림 6)

## Ⅱ. 정당공천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

### 이슈 #3

####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음.

-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기초단위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가 공론화된 이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음.
- 폐지에 찬성하는 측은 주요 논거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2006년 도입되었던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지방현안이 다루어지지 못하는 등 지방정치가 실종되는 상황으로 이어졌음. 둘째, 정당공천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공천과 관련한 각종 비리와 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셋째, 지역주의 선거 경향으로 각 정당이 정책적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우므로, 정당 공천의 의미가 약화되어가고 있음.

(단위: %)



주 : ○ 안의 숫자는 여성국회의원 비율 순위임

〈그림 6〉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30% 이상인 국가들의 할당제 실시 현황

- 이에 대해 폐지에 반대하는 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고 있음. 첫째, 정당공천제를 통해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고,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통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 둘째,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셋째, 정당공천 과정에서 여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넷째,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문제,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민주성 및 비리 등의 문제는 공천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가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정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함.(〈표 3〉)

#### ☞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 판단기준의 혼란, 정치적 관심 저하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실제 2010년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무소속 출마자의 당선율이 여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의 당선율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초의회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유권자들은 판단기준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임.

※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지로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낮아지고, 하위계층의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이 초래되었다는 분석이 있음.

- 즉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방정치가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는 점이 지적됨.

※ 일본의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정당간 정치적 대립축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실정임.

## 이슈 #4

### 여성계에서 본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 ☞ 정당배제선거가 현실화되면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임

- 정당배제선거는 정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존 남성위주의 선거에서 벗어나 여성의 공직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정당배제 선거의 경우 여성의 공직 진출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임.
- 이는 정당의 영향력이 배제되거나 줄어든 상황에서 재력, 직업, 신분 등 개인적인 역량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임. 여성은 상대적으로 남성 혹은 기존의 현직 의원에 비해서 경제적 자원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편임. 따라서 정당의 도움 없이 여성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여성단체 등 인적 네트워크의 도움이 절대적임.
- 특히 한국의 경우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및 공직 진출이 정당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여성단체의 다양성 및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당배제 선거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표 3〉 정당공천제 폐지 찬반 논의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측 논거	정당공천제 폐지 반대 측 논거	정당공천제 폐지후 제기되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치가 중앙에 예속됨.</li> <li>• 공천과정의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못했음.</li> <li>• 지역주의 선거경향으로 정당의 정책적 차별성이 드러나지 못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책임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음.</li> <li>• 정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li> <li>• 여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li> <li>• 공천시스템의 개혁을 통해 공천과정의 비민주성 및 비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혼란이 야기될 것임.</li> <li>•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 투표참여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방정치가 위축될 수 있음.</li> </ul>

※ 미국의 경우를 보아도 지방정부수준에서의 정당배제 선거가 여성의 공직 당선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여성할당제 규정이 없지만, 지방의회 여성참여비율이 정당의 여성 후보 공천에 힘입어 일정정도 상승하고 있음.

- 또한 지방 정치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당공천제도의 폐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천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공천과정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지적함.
- 여성계 일부에서도 정당공천제도의 폐지는 향후 비례대표와 여성할당제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상대적으로 조직과 자금에서 열세인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크게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이슈 #5

###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방안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대안적 논의로 지역구 여성 30% 공천의무화, 비례대표 확대 및 여성할당 강화, 여성명부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남녀동반선출제 등이 제시되고 있음.

-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기초단위 정당공천제의 폐지 쪽에 힘이 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현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몇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주장임. 선출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50%와 홀수번호 부여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임. 이와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이행조치를 두어야 한다고 봄. 현행 공직선거법 상,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와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는 의무사항으로, 지역구 30%는 노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둘째, 비례대표 확대 및 여성할당 강화 주장임. 정당공천폐지를 기초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로 분리해서 적용하고, 현행 비례대표 정수를 각급 의회 의원정수의 10%대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임. 이러한 주장의 한계로 당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근거로 거론되어온 지방의 중앙정치에의 예측이나 공천비리 등 정당의 영향력 배제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이 지적됨.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례대표 100% 여성 추천은 여성의 대표성 위축에 대한 위기감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성정치지도자의 성장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됨.

• 셋째, 여성명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임. 이는 기존의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명부를 무소속 여성명부로 대체하는 것으로, 여성명부등록을 희망하는 여성후보자들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성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하고, 유권자들은 직접 여성명부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임.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하고, 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여성명부 후보자에게 투표함. 이 경우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성들만의 경쟁구조를 형성시킴으로써 여성을 정치적 소수자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넷째, 여성(전용)선거구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임. 특정 선거구를 여성만 출마하는 여성전용선거구로 정하고 여성끼리 경합하여 다수표를 얻는 여성들을 당선시키는 제도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되며, 현실적으로는 여성전용 선거구가 아닌 지역구에 입후보한 여성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이 한계로 지적됨.

• 다섯째, 남녀동반선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임. 한 선거구에서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유권자는 남성후보 1인과 여성후보 1인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고 다수를 얻은 남녀후보가 각각 선출됨. 남녀동반선출제는 정당공천제도의 존속 혹은 폐지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에 있고, 결과의 평등을 보장

〈표 4〉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방안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화	비례대표 확대 및 여성할당 강화	여성명부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남녀동반선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50% 및 홀수번호 부여 의무화</li> <li>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 지역구 30% 여성할당 의무화</li> <li>강제이행 조치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공천폐지를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로 분리 적용</li> <li>현행 비례대표 정수를 각급 의회 의원 정수의 10%대→30%이상으로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기초의회 비례대표 정당 명부를 무소속 여성명부로 대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정선거구를 여성만 출마하는 여성전용 선거구로 선정, 여성끼리 경합하여 다수표를 얻는 여성이 당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남성 후보 1인과 여성 후보 1인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고, 다수표를 얻은 남성 1명, 여성 1명을 선출</li> </ul>
	<p><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의 영향력 배제와 논리적으로 모순</li> </ul>	<p><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들만의 경쟁구조를 형성시켜 여성을 정치적 소수자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음</li> </ul>	<p><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법이 보장한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li> <li>여성전용선거구가 아닌 지역구에 입후보한 여성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저하</li> </ul>	<p><b>【문제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주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고,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지 않다는 기본원칙에 위배</li> <li>여성후보자 수 부족</li> </ul>

하는데 있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50%를 당선시킬 여성 후보자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됨(〈표 4〉)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한 것으로 보임.

#### ☞ 여성 인재 발굴 및 육성 체계, 정치적 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사회적 기반 조성이 필요함.

- 또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지금까지 정당이 해왔던 여성후보 발굴, 육성, 지원 기능을 수행할 주체가 모호해지고, 정당에서 여성을 위해 사용하던 국고보조금이나 여성추천보조금 등도 폐지될 수 있음.
- 따라서 우수한 여성인재풀을 구축하고, 여성정치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 및 여성 정치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기반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임.
- 새로운 선거제도 개선방안이 한 나라의 정치적 지형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각 국가의 상황, 특히 선거제도의 구성, 시행 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임. 따라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도입될 새로운 제도들이 한국의 정치적 지형에서 현실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적합한지 여부는 매우 신중히 고찰되어야 할 것임.

### Ⅲ. 맺음말

####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대안적 논리, 전략, 실천방안 모색이 시급함.

- 정당공천제의 폐지가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위협받게 되리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가 한국 정치 전반의 지형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라는 사회적 합의점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임. 이를 위해서는 전체 여성계가 대안적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함.
-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정치 참여확대와 더불어 지방 정치의 활성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이 동시에 달성



## ◆ 참고자료 ◆

☞ 19대 국회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임.

- 지방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초의회 선거구제를 다시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방안, 정당공천제 폐지 등이 주요 내용임.

〈표 5〉 19대 국회 계류중인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일자	대표발의	주요골자	공동발의 여성의원
2012.06.13	여상규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전환	김을동
2012.06.28	강기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전환	박인숙
2012.07.12	이명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정당 표방 금지	김을동, 문정림
2012.09.11	이재오	기초/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당적보유 및 정당표방 금지 정당의 지지·지원금지	전순옥
2012.10.30	이상규	지역구 공천 여성 30% 강제	김제남, 김미희 김재연
2012.11.16	유승우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전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윤명희, 김을동
2012.11.22	신의진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및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 제외 정당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후보 지지 표방 금지 기초의회 비례대표 의원정수 확대 (10% → 30%) 및 100% 여성공천	손인춘, 김현숙 강은희, 류지영 윤명희
2013.02.05	정갑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 소선거구제 전환 기초의원·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및 정당 선거사무소 설치 제외 정당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후보지지 표방 금지	
2013.05.20	황주홍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당적보유금지 비례대표를 여성명부로 전환하고, 의석비율을 30%로 확대	윤명희, 문정림
2013.08.09	유승희	기초선거 남녀동수제 도입 중선거구제 기존유지 국회의원 및 광역의원 선출직 여성 30% 의무화	김 현, 박혜자 서영교, 이미경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한정애

\* 출처: 김은희(2013), “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 지역정치와 여성정치세력화의 관점에서”,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2013.8.21),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14쪽

(자료정리 : 김정미 연구원)